

# 지역산업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2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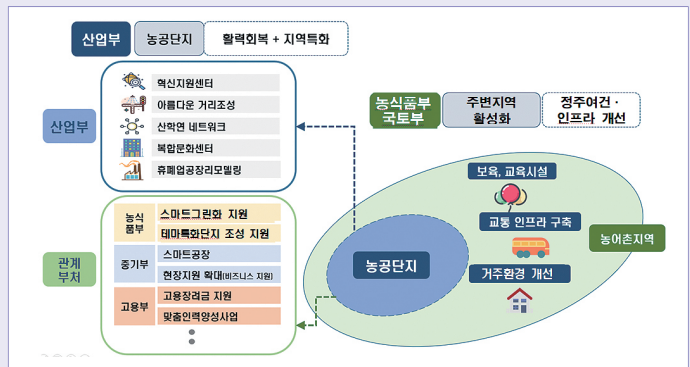
중앙 관계부처는 1984년 처음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후 최근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인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 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물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을 농공단지로 확대 적용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지역산업과 문화공간'을 비전으로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 및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중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구성한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특화된 사업 규모와 용도를 고려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한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 플랫폼\*\*\* 조성 등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자 한다.

- \* 산업단지의 네 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사에 약 15만 3,000명 근무)
- \*\* 시·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 인프라 구축 및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
- \*\*\* 공공주택(일자리 연계형 등) 공급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 구축



농공단지 및 인근 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7월 22일 보도자료.